

여야, 26조2천억 추경예산안 심사 줄다리기 본격화

국힘 “고유가 지원금 선거앞 현금 살포”
민주 “비상상황 방치 안돼” 심사 속도전
李대통령 “지방정부 부담 증가 말 안돼”

26조2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 시한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이번 추경에서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씩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사실상 지방선거를 앞두고 4조8천252억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대신 해당 재원을 운수업체나 소상공인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1천500억원) ▲국세청 채납관리단 운영 예산(2천133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706억원) ▲K-콘텐츠 펀드(500억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320억원)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 확산(870억원) ▲AI 데이터센터 건설(140억) 등의 삭감도 버리고 있다.

이 밖에 가정용 미니태양광(250억원), 태양광 보급(624억원)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도 삭감 대상이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나 문화 예술 지원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원안 관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우 선별 지원을 통해 경제 상황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 진작 효과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 분야 역시 경제가 안좋아지면 타격을 크

게 받는 만큼 정부 지원을 통해 관련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선거용 매표 추경’이나 인플레이션 우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통화 공급을 확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물가 상승 요인을 흡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만큼 국회는 조속히 추경을 통과시키고 정부와 정치권 모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7·8일 예정된 종합정책질의 및 특별 심사 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앞서 오는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천400억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3천200억원으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용 인용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조7천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조천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천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전체 재정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내일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정청래·장동혁 靑초청 초당적 협력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갖는다.

회담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오전을 겸해 진행된다. 정 대표와 장 대표 외에도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송인석 원내대표도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하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부 수석도 함께한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는 것은 작년 9월8일 오찬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홍익표 정부수석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및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홍 수석은 회담 추진 배경에 대해 “중동 전쟁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 대통령께서 제안한 것이고, 물론 그에 앞서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도 유사한 제안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남동성당 찾은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광주 동구 남동 5·18기념성당을 찾아 김승제 주임신부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예리기자

‘5·18정신 수록’ 개헌안 발의... ‘地選 동시투표’ 스타트

187명 의원 명의...계엄 국회통제 강화

국힘서 10표 이탈표 나와야 국회 통과

국민의힘을 뺀 여야 의원 187명 명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에 공식 제출됐다.

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개헌 국민 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국회 관문을 넘기 위해 필요한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올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개혁신당 천하람 등 여야 6당 원내 대표들은 이날 오후 5시43분께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개헌안을 제출했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4·19 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정한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균형발전의 의무도 포함됐다.

한자로 돼 있던 헌법 제명(大韓民國憲法)을 한글(대한민국헌법)로 바꿔 표기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헌안 발의에는 민주당·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187명이 참여했다. 이들 정당 소속이거나 이들 정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가운데 구속 상태인 강선우 의원만 발의에 불참했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이후 대통령의 개헌안 공고(20일 이상), 국회 의결(대통령

의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의 결 후 30일 이내) 등의 절차가 남게 됐다.

정부는 6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돼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5명 중 3분의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각 의원이 투표에 불참할 경우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이탈해야 한다.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김용태 의원이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투표에 찬성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조경태 의원은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김문수, 지방의회 인사 독립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5일 “지방자치의 인사권과 예산권 독립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군과 직렬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 심사를 거쳐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의 의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이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